

간급토론회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 프 르 그 램 〕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0	축 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10:10~10:15	개 회	개회 및 사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15~10:35	발 제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의 반헌법성’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10:35~10:45	토 론 1	조우석 (KBS 이사/문화평론가)
10:45~10:55	토 론 2	류석춘 (연세대 교수)
10:55~11:05	토 론 3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11:05~11:15	토 론 4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11:15~11:30	종합토론	

〔 목 차 〕

주 제 발 표

■ 발 제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의 반헌법성’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09

토 론

■ 토 론 1	조우석 (KBS 이사/문화평론가) 19
■ 토 론 3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25

[긴급 토론회]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

[발제]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의 반헌법성’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I. 문제제기

올해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한 정치지형과 야당들의 경쟁적 호남 구애작전(?)과 맞물려 있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볼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고, 16일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기념식에서 합창 형식을 유지하고, 5·18 기념곡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놓고 야당은 시작부터 협치(協治)를 깐 것이라며 반발하고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도 재고를 요청하는 등 여야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보수 언론마저 이에 가세하는 혼돈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가보훈처장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정확한 실체를 안다면,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반헌법적 작태임을 깨달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가요이므로 합창이나, 제창 및 기념곡 지정도 부적합하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부정하는 자행위임을 지적한다. 기념식에서 합창을 허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국가보훈처가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Ⅱ.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체¹⁾ 와 반(反)헌법성

1.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작 배경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광주사건에서 희생당한 30세의 청년 윤상원(일명: 윤개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동 가요를 작곡한 김종률(당시 학생가수, 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2013년 5월 12일 한국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이 곡을 제작된 직접적인 동기는 윤상원과 그의 야학동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이라고 밝혔다. 윤상원과 박기순은 전남대학교의 동문이었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야학운동의 동지였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사망한(박기순, 1978년 12월 사망) 두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두 사람의 친구와 가족들이 두 사람의 넋을 달래기 위해 1982년 2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올렸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석영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운동가들은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을 기리는 노래곡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노래곡에 들어가는 하나의 노래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석영의 주장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작된 직접적인 동기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이 아니고, 1983년 봄 황석영과 극단 ‘광대’의 잔여활동가들이 전개한 「자유 광주」 방송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광주항쟁 과정에서 죽은 남녀를 주제로 한 넋풀이 극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황석영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 광주」 방송 활동이란 한 달에 한 개씩의 노래곡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활동이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주제곡으로 들어 있는 넋풀이 노래곡의 테이프는 「자유 광주」 방송의 세 번 째 작품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그 주변 인사들의 회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윤상원도 광주사건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 노래가 직·간접적으로 윤상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오늘날 광주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던 사람들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신성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윤상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은 당시 황석영이 이끄는 문화운동 패의 일원이면서 전남대 학생으로 대학가요제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김종률이 맡았다. 작사는 황석영이 맡았다. 황석영은 백기완의 시 '꽃비나리' 중의 일부 대목을 뽑아서 동석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약간

1) 이상의 내용은 양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의 문제점”, 5.18 기념곡 제정관련 토론회 자료집,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2015.4.2.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요약 발췌함.

수정해서 노랫말로 만들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과 윤상원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광주사건에서 희생당한 30세의 청년 윤상원의 넋을 달래고, 그의 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임’이란 윤상원을 의미하는 것²⁾이고 이 노래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위해서는 윤상원이란 인물을 조명해야 한다.

윤상원은 1978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입사하여 서울에서 근무했으나 이른바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입사 6개 월 만에 사직하고 광주로 돌아왔다. 광주로 돌아온 윤상원은 광주 청년·학생운동의 중심인물의 하나인 김상윤이 운영하는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을 위해 광주시 광천공단 내 한남플라스틱 공장에 일당 노동자로 위장 취업하는 동시에 그 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들불야학’에 참여했다. 뒤이어 빈민청년운동에도 참여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윤상원은 전남대 운동권 재학생들과의 연계도 강화했고, 1979년 가을 무렵엔 광주 운동권의 비중 있는 인물의 하나로 부상했다.

10·26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자 전국 각지의 운동권들이 활동을 확대했으며, 윤상원도 혁명적 노동운동을 준비하는 이태복과 1979년 12월 접선되어 혁명적 노동운동단체 결성에 참여했다. 1982년 당국에 적발된 ‘전국민주학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의 주범 이태복은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하기 위해 1979년 12월 초순부터…윤상원 등과 만나 노동자조직 구성을 위해 활동하고, 1980년 5월 3일-5일 ‘전민노련’을 결성”했다.³⁾ 윤상원은 전민노련 결성에 참여하여 중앙위원이 되었다. 당국에 따르면, 이태복이 주도하고 윤상원이 참여한 전민노련은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집단으로서의 노동자 집단을 조직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윤상원은 또 그 해 봄에 결성될 예정인 기성인 운동권의 결집체였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전남지부’의 사무국장으로 내정되었었다.

이른바 5·18 항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상원은 광주지역의 변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부가 5·17 계엄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운동권인사들을 예비검속하자 광주지역 운동권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의 대부분은 검속을 피해 광주를 떠나 타지로 피신했으나, 윤상원은 체포 경력이 없어 당국의 예비검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광주에 남아서 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2) 일부에서는 ‘임’이 북한 김일성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과정된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윤상원 등 이른바 광주 항쟁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대검찰청, 『공안자료 제1집(좌익사건실록 제13권)』(대검찰청, 1984), 348-349쪽. 양동안, 앞의 논문, 재인용.

윤상원은 전남대생들의 가두시위가 개시된 시점부터 녹두서점에서 광주에 잔류한 운동권 인사들과 학생 시위를 확대할 대책을 강구하고, 화염병을 제작하여 시위 현장에 공급하고, 화염병 투척방법을 지도했다. 또한 들불야학 팀을 동원하여 투쟁과 관련된 선전·선동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윤상원은 5월 19일에는 가두투쟁에 직접 참가하여 진압군에게 돌멩이, 깡통수류탄, 화염병 등을 투척하기도 하고 공수부대원을 직접 살해하기도 했다. 윤상원의 공수부대원 살해에 관해서는 항쟁기간 중 그를 추종하여 활동한 김효석이란 당시 고등학생이 증언하고 있다.⁴⁾

윤상원은 21일부터 전 민중의 무장봉기를 촉구하는 선동물을 제작하여 살포했다. 시민군이 도청을 점거한 22일 오전부터 윤상원은 도청의 시민군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청을 점거한 시민군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동조자들을 포섭하고, 도청 앞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도청 시민군 지휘부로 하여금 계엄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계속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당시 도청 안에 있는 시민군 지휘부인 시민·학생수습위원회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무기를 반납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상원은 무장투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연일 개최하는 동시에 도청에 가까이 있는 YWCA 빌딩에 들불야학 팀, 극단 ‘광대’ 팀, 기타 운동권 대학생들로 구성된 행동대를 조직하여 도청 진입을 준비했다. 무장투쟁을 위해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쟁지도부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윤상원과 그의 민민운동 동지들의 생각이었다.

윤상원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도청접수를 추진하면서, 계엄군과의 투쟁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들을 도청에 인질로 잡아두는 계획을 동지들과 은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군부의 광주 진압을 위한 병력투입은 미국의 승인 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므로 도청에 미국인을 인질로 잡아두고 있으면 계엄군이 함부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미국인을 인질로 잡아두려는 윤상원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25일 오후 윤상원과 그의 동지들은 도청 접수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날 오후 5시 경 도청의 학생수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무기반납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다. 회의에서 위원장 김창길의

4) “20일 날인가 내가 녹두서점에 점심인가를 먹을라고 와서 쉬고 있었던가 그랬는디 상원이 형이 용용하게 옵니다. 철모하고 단검을 하나 들고 오드라고. 내가 ‘뭔 일까요?’ 물어보니까 ‘내가 한 놈 죽여불고 왔다’ 하더라고. 상원이 형 이야기가 태평극장과 현대극장 사이에서 공수부대와 시위대가 밀고 당기고 했다는 거여. 천변로에서 계속 밀고 쫓기면서 돌멩 이를 땅기고 했다는데. 시민들이 도망가면 계속 다들 일정 정도 쫓아오다가 다시 대열로 돌아가는데 어떤 놈이 계속 끄트머리까지 쫓아오더라 이거여. 근디 상원이 형이 그놈 보니까 비틀비틀하니 술 취한 놈처럼 그러더라 이거여. 그래서 ‘아 저놈을 봐 버려야겠구나’ 생각하고 도망가면서도 시민들한테 ‘저 놈 봐불자’ 그랬다는 거여. 도망가던 군중들도 돌아서서 보니까 혼자 쫓아오고 있거든. 그래서 ‘와!’ 하니 쫓아갔다는 것이여. 그러니까 그놈이 놀래서 하천으로 뛰어내려 분 거여. 시민들이 하천으로 뛰어 내려가 가지고 그놈을 밟아 부렸지. 그 때 상원이 형이 거기서 큰 돌팍을 들어가지고 대그빡을 찍어 부렸다는 것이여. 그 기념으로 철모랑 단검을 뺏어왔다는 것이여. 아마 그 공수부대원은 죽었을 거라는 거여. 그래 가지고 녹두서점으로 철모하고 단검을 들고 왔어.” 김효석, 「나는 역사의 새벽을 보았다」, 김양현·강현정 역음, 『5·18항쟁 증언자료집 IV』(5·18연구소 자료총서 4)(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106-107쪽.

주도 하에 무기반납에 동조하는 성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에 반대하는 성원은 부위원장 김종배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했다. 윤상원은 도청으로 들어가 김창길을 비난하는 고함을 지르며 회의를 무산시켰다. 회의를 무산시킨 직후 YWCA빌딩에 모여 있던 운동권 청년들과 지도급 학생들을 도청으로 불러들여 김창길에게 위원장 사퇴 압력을 가했다. 김창길은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후 그의 말에 동조하는 다수의 시민군들과 함께 도청에서 철수했다. 윤상원 일행은 일종의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윤상원은 저녁 8시 경 YWCA로 가서 도청진입을 위해 대기 중이던 청년 학생 1백여 명을 인솔하고 도청에 진입하였다. 도청에 진입한 윤상원은 시민·학생수습위원회에서 무장투쟁 지속을 주장해온 김종배 박남선 등 소수파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청년학생투쟁위원회라는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김종배를 내세우고, 부위원장은 정상용과 허규정, 상황실장은 박남선이 맡고, 윤상원은 대변인을 자청하여 맡았다. 이때부터 광주항쟁의 지도부는 전문 운동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5월 26일 새벽 계엄군의 광주 진입작전이 개시되자 새로운 항쟁지도부는 진압군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의했다. 진압군이 진격해오면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을 무장시켜 저지하고, 저지에 실패하면 게릴라전을 대항하며, 최후의 순간이 오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 전원 자폭하기로 결정했다. 항쟁기간 중 도청 지하실에는 8톤 트럭 1대 분량 다이너마이트(이리역 폭발사고의 10배 위력을 가진 분량)가 뇌관까지 설치된 상태였다. 윤상원 등이 계획대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켰더라면 광주 시내의 절반 이상을 쑥밭으로 만들고 수만 명의 광주 시민이 폐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김창길 등 온건파가 군의 폭약전문가들과 협조하여 25일 밤과 26일 낮에 도청 지하실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들을 제거함으로써 광주 시민 수만 명을 자기들의 자살에 동행시키려던 윤상원 등의 다이너마이트 폭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5월 26일 저녁 도청에서는 시민·학생 통합수습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원 30명 중 20여 명이 넘는 성원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김창길이 제시한 무기반납론이 또다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무기반납에 반대하는 소수파가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잔류 성원들은 무기반납이 의결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상원은 무기를 휴대한 박남선 상황실장(시민군 군사지휘 총책)을 앞세우고 동지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갔다. 박남선이 무기로 위협하는 가운데 윤상원은 무장투쟁 지속을 강조했다. 무기반납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결의는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무장투쟁을 고수하는데 앞장선 윤상원은 27일 새벽 3시 경, 도청 무기고 앞에서 잔류 시민군 병사들에게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호소했고, 새벽 4시 경 공수대원의 사격에 복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3. 「임을 위한 행진곡」의 반헌법성

첫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투쟁한 진정한 민주화운동가를 기리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이른바 광주항쟁에서 끝까지 투쟁한 윤상원의 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넓게는 이른바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을 위해 윤상원과 같이 최후까지 투쟁하다 사망한 자들을 기리는 노래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윤상원의 사회주의지향의 투쟁경력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노래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진정한 '광주민주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운동이 결코 아니다.

둘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른바 운동권세력(지하혁명세력 포함)들에 의해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는 대표적 운동권 가요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운동권세력들은 각종 행사나 비밀회합 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이른바 민중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적발된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 및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사건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구현하려는 가요라면, 결코 혁명세력들에 의해 불릴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선동하는 이른바 혁명가요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인민봉기" 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 사변"로 규정하고⁵⁾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또한 5.18 관련자들을 애국열사능에 가묘를 세워 안장하고 조국통일상 등을 수여한 바도 있다.

특히, 북한은 1991년 5.18를 소재로 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당시 불법 방북한 황석영과 리춘구(북한작가)가 공동 집필하고 음악은 재독 친북음악가 윤이상과 리종오(북한 음악가)가 담당하였다. 동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두 차례에 걸쳐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있다.

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5.18 광주인민봉기, 우리민족끼리 논설(2016.5.18.일자).

국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제작을 주도했던 황석영⁶⁾이 불법 방북하여 5.18 관련 혁명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림】 북한에서 만든 5.18관련 혁명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또한 북한이 발간한 혁명가요집 <통일노래 100곡 모음집>(윤이상음악연구소, 1990)에 국내 운동권 가요가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 의해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의 반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III. 정책제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나, 5.18 기념식에서 합창 또는 제창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행위는 한심한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또한 백번양보해서 행정절차측면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기념곡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발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기념일 및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6) 북한 5회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7년 선고.

기념일에도 기념곡으로 지정된 노래는 한편도 없다고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기념곡 지정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무식함에 앞서 망국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현재의 혼돈국면은 이른바 5.18 광주민주화운동 가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된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사폭압체제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이다. 그런데 당시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세력들 중에는 대다수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세력과 함께 광주사태라는 혁명적 국면에 편승하여 자기들의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하려는 계기로 조성하려는 소수의 이른바 짹퉁 민주화운동세력(혁명세력)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이라 평가한 것이 현재의 혼돈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바로 대다수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세력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소수의 이른바 짹퉁 민주화운동세력(혁명세력)을 위한 노래이다.

따라서 혁명선동가요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진정한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희생자들의 유지를 훼손하고 배신하는 것이며 더나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기념곡을 새로 작곡하여 5.18 기념식 때 전 국민과 함께 합창 또는 제창할 것을 제안한다.

[긴급 토론회]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토론①]

반(反)대한민국 혁명가요가 협치의 대상일 수 없다 - ‘임 행진곡’ 제창 요구하는 무식한 정치권이 잘 모르는 것

조 우 석
KBS 이사/ 문화평론가

“노래 한 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17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그러한데, 이어지는 관련기사는 한 술 더 뜯다. “제창 불가” 결정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누구? “사흘도 못 간 ‘소통 합의’…청(靑), 여소야대 정국구상 타격”.

애국적 결단을 한 주무부처의 수장(首長)을 마녀사냥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그 사람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청와대가 코너에 몰렸다는 식이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짜 조선일보는 6면 머리기사로 “협치 혼드는 ‘노래 한 곡’… 5.18상징 vs 국론분열”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4.13총선 이후 청와대 혼들기에 올인 하는 이 나라의 언론이 시도 때도 없이 협치 타령을 반복하고 있지만, 무얼 모르고 떠들긴 여의도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야당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기막히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까지 그 지경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 모두가 외치는 ‘협치 만능주의’의 덫

16일 새누리당 비대위원회 비공개 회의는 “협치를 하기로 한 마당에 첫 단추부터 이렇게 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튀어나오면서 보훈처를 성토하는 분위기로 성큼 바뀌었다. 그 당의 원내대표 정진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를 결정한 보훈처에 유감의 뜻 표명과 함께 재고(再考) 요청을 했던 것도 그 배경이다.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 ‘협치 만능주의’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들 모두가 깊지 못하는 맹점은 따로 있다. 협치가 결코 무원칙한 혼합정치 내지 잡탕을 뜻하는 건 아니란 점이다. 결정적으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건 국가정체성을 혼드는 대목이다.

협치의 큰 정신이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국가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정치권-언론의 마구잡이 식 협치 논의가 그걸 모두 잊고 있으며, 특히 ‘임 행진곡’과 관련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상식이지만, 협치란 영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번역어. 사전적 의미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을 말한다. 세상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용어다.

잊으면 안 되는 게 거버넌스(governance)의 어원이다. 그건 steer(키를 잡다, 조종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kubernáo)에서 파생됐다. 그렇다면 기억해둬야 한다. 사공이 많다고 모두 키를 잡으려 할 때 대한민국 호(號)란 배는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2. 천박한 정치인 박지원을 주의하라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협치가 급부상한 거야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결정을 협치란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건 명백한 잘못이다. 또 정치적 자살골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협치의 상징일 수는 없는데,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이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리가 마련된 기회에 선물 하나만 달라”는 식으로 요청한 것부터 실수였다.

그 발언 자체가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호남지역을 볼모로 한 아바위꾼인지, 그리고 천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보여줬을 뿐이다. 새삼 밝히지만, ‘임 행진곡’은 “세상을 뒤엎자는 반역정신의 노래”이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는다.

반복하지만, 그 노래는 반체제 혁명가요일뿐이며, 황석영-백기완 등 반(反)대한민국 인사들이 만든 노래다. 북한영화 배경음악인 종북의 노래라서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점도 걸린다. 그걸 광주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거야 말릴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 이상은 결코 안 된다.

시민단체인 ‘광주5.18진상규명국민모임’이 15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북조선의 적화선동 영화 주제

가를 대한민국 행사에서 부르겠다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조선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었단 말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이다.

3. “애국가를 숨죽여 부르는 세상이 올까 두렵다?”

그건 ‘임 행진곡’의 원시(原詩)인 백기완의 혁명 시 ‘뭣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띠우는’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언론과 정치권은 그런 수고조차 거부한 채 성역화된 광주5.18에 그냥 아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투사들에게 “새날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 나라의 공식 기념곡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가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임 행진곡’을 둘러싼 이번 사태야말로 이 나라 지성인과 정치권이 모두 체제수호 의무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더욱 참담하다. 그래도 박승춘 보훈처장이란 뚝심 있는 애국자를 재확인할 수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타협을 할 게 따로 있고, 협상을 할 것이 따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노래‘임 행진곡’을 원칙대로, 순리대로 처리해주길 재삼 부탁한다. 그 결정을 뒤집으면 야단난다. 그런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국가보전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재삼 환기시켜드리려 한다.

‘임 행진곡’은 그걸 점검하기 위한 썩 중요한 시금석이다. 기회에 요즘 들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세력 사이에 주고받는 심상치 않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려 한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좌익세력에게 밀리다가는 애국가를 몰래 숨어서 숨죽인 채 불러야 하는 끔찍한 세상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 이 글은 5월17일자 미디어펜에 실렸던 기명 칼럼을 보완했습니다.

[토론②]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류석춘
연세대 교수

[토론③]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우선과제

이 옥 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1.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일지

-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에서 2008년까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해왔음
- 2008년 정부기념식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 등에서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흔들며 새날의 그날까지 임을 위해 행진 하겠다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 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나,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하여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정부의 검토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논란 해소를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하여 제창하기 위해 예산반영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야당 및 5·18관련 단체에서는 새로운 노래 제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2. 애국가의 위상 문제

□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국가상징인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임

□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국가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 진 것. 따라서 국가상징은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지님. 애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과 함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상징임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애국가의 위상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하여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로 이에 맞지 않음

- *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행사
 - 4·3희생자추념식 : ‘빛이되소서’ 등 식전공연에서 합창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임을 위한 행진곡’ 본 행사에서 합창
 - 6·10민주항쟁기념식 : ‘광야에서’ 본 행사에서 합창

3.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국가 기념곡 찬반 논쟁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찬성 쪽의 의견은

-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의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이므로 5·18기념식에서 제창을 요구
- 정부에서 “국민통합 저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반대쪽의 의견은
 -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
 - 북한이 1991년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노래제목과 가사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4.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각 종 의혹과 논란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한다고 광주 5·18의 숭고한 의미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폄훼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최초 작사자(백기완, 황석영)들의 반체제활동, 1991년 북한에서 제작한 5·18 선동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황석영-리춘구 공동 대본 작업)’에 삽입되었다는 주장, ‘임’과 ‘새날’에 대한 의미, 5·18 당시 윤상원 행적(『역사로서의 5·18』 p.331)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

5. 현재로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각 종 논란으로 이미 국가기념곡으로서 흡결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됨
-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현재 그 자체로 국론 분열과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곡으로서 이미 국가기념곡으로서의 자격에 흡결을 지님
-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임

[토론④]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명칭	바른사회시민회의(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CUBS)
설립목적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순수 비영리 시민단체(NGO) "살기 좋은 나라는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창립일	2002년 3월 12일
회원	20,000여명 (2016. 5. 현재) (일반시민, 대학생, 학계, 법조계, CEO,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정회원 2,000여명, Cyber 회원 및 특별회원)
로고	 <p>〈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의 핵심은 왼쪽에 있는 두 명의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시민들이 모여 크게 화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푸른색은 자유주의(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상징하며, 녹색은 자연처럼 맑고 깨끗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입니다.</p>
CUBS 약칭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의 약자 또한 영어단어 cubs은 사자, 호랑이 등의 새끼, 사회초년생, 젊은이 등을 의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CUBS를 도메인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새끼 사자, 새끼 호랑이에 불과하지만 열정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든다면 머지 않아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어른 사자나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



고문

김광명 (한양대 명예교수)	김동기 (고려대 명예교수 학술원회원)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김종현 (한국예총 사무총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남시욱 (광화문문화포럼 회장)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	박성조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종신교수)
봉두완 (생활개혁실천협의회 대표의장)	사공일 (한국무역학회 이사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유재천 (상지대 총장)	이원수 (국제시사만화가)
한영탁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공동대표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무총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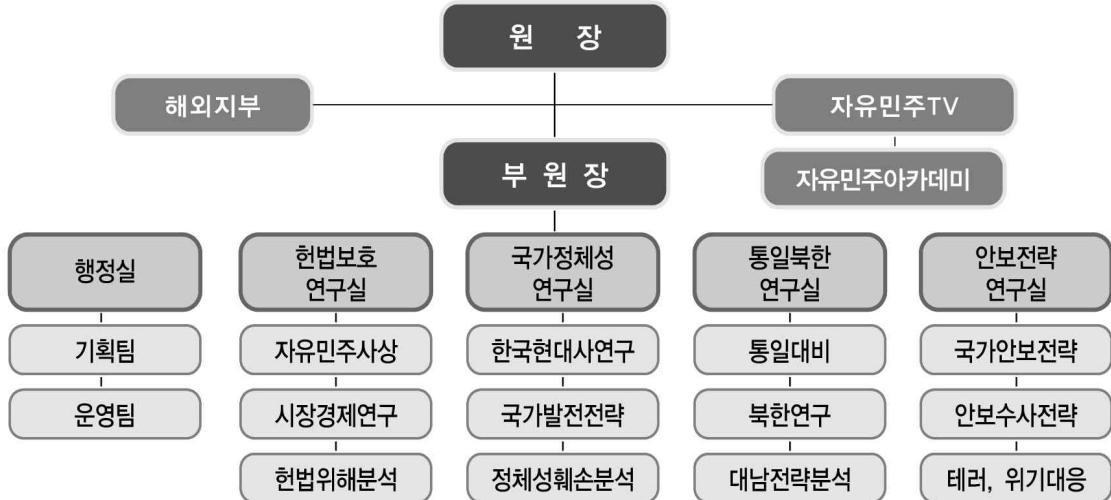
감사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운영위원	
정치/행정	외교/북한/안보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규형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교수) 김승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자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경영	금융/행정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일섭 (안전회계법인 회장)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종호 (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송현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이영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임미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진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간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수호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재무/ 회계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경제학) 교수)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종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통상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법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박기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인환 (간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승실대 법학과 교수) 조영길 (I&S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영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교육	심리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호 (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기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교수)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문화	미디어
남정욱 (승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왕치선 (음악평론가) 이문호 (한림국제대학원대 경영학과 교수) 홍 택 (시스템랩 대표)	권만우 (경성대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정석 (시너지웍스 대표)
의료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정규식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조중근 (한국지속기능기업연구회 회장)	김종석 (차병원의과대학 의과전문대 교수) 오은환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자유민주연구원 소개

자유민주연구원은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전략을 학술적으로 연구,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3월3일 설립되었으며, 국세기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2014년 3월 27일 등록하였습니다.

▶ 자유민주연구원 조직과 사람들



▶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이철승(서울평화상 이사장, 전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7선 국회의원), 정기승(변호사, 전 대법관), 안웅모(전 내무부장관), 이동복(전 국회의원),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송대성(전 세종연구소장),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대표,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4선 국회의원)

▶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고영주(위원장)(변호사,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전 서울남부지검장), 고성진(덕우회장, 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 김길자(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전 경인여대 총장),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석우(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전 통일원 차관), 김영수(서강대 교수, 전 서강대 부총장), 김혁수(예비역 해군준장, 전 해군잠수함 전단장), 권영철(전 국정원 국장),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 박광작(전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안충준(전 3사단장, 초대 PKO 사령관), 박정이(예비역 육군대장, 전 1군사령관), 안영섭(전 명지대교수),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여영무(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호열(고려대 교수, 코리아정책원장), 이봉엽(예비역 육군소장, 전 기무사 참모장), 이병진(경우회 부회장, 전 경찰청 보안국장, 경북경찰청장), 이주영(뉴데일리 이승만연구원장, 전 건국대 부총장), 조용연(삼성에스원 상임감사, 전 경찰청 보안국장, 충남경찰청장), 전경만(한국국가정보학회장,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정순영(세종대 석좌교수, 전 부산동명대 총장), 한광덕(전 국방대학원장, 5사단장), 서석구(변호사, 전 판사)

▶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헌법보호연구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수호, 발전), 김상겸(동국대 법대학장 – 헌법수호, 발전), 권혁철(자유경제원센터장 – 자유시장경제), 함귀용(변호사, 전 대검공안연구관–헌법 위해상황), 백병훈(T뉴스미디어그룹 부회장)

▶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국가정체성연구실

유광호(연세대 연구교수), 이주천(원광대 교수 – 현대사 훼손), 김광동(나라정책원장 – 국가 발전전략), 강규형(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 교육, 현대사), 이동호(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 종북문제), 김진술(북앤피플 대표 – 문화예술), 권유미(블루유니온 대표 – 인터넷), 장원재(방송인, 전 숭실대 교수 – 언론, 미디어)

▶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통일북한연구실

실장 강석승(서울교대 겸임교수, 전 민주평통 운영위 간사, 전 통일부 과장 – 남북대화), 김정봉(한동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북한정치, 군사),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경제), 임상철(상지대 교수 – 북한사회 농업), 이백규(변호사 김앤장), 전 서울고법 판사 – 북한법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 대남전략), 제성호(중앙대 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 일대비), 황윤덕(전 국정원 단장 – 통일대비, 통일정세, 국제정치), 최봉수(단국대 교수 – 통일대비), 정병윤(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안보전략연구실

실장 문순보(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용석(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방안보전략),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군사전략), 정찬권(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위기대응), 박춘식(서울여대 교수,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 사이버안보), 정준현(단국대 법대 교수 – 사이버안보), 박노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외안보법제), 허태희(선문대 교수, 전 국정원 전문위원 – 테러), 성시웅(변호사, 전 부천지검장, 대검 공안연구관 – 안보수사), 김원환(전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 안보수사), 김재권(전 경찰대 교수 – 보안수사 담당 – 안보수사), 이덕기(전 기무사 방첩단장 – 안보수사), 조춘성(박사), 구정환(박사), 김수민(연구원)

▶ 해외지부

미국 동부지부 원장 민경원(미주애국연대 의장)

미국 시카고지부(준비위)

미국 L.A. 지부 원장 김봉건(자유대한민국지끼기 국민운동본부 회장)

미국 오렌지카운티 지부 원장 JOY 안(대한민국애국동포총연합회 회장)

유럽지부 준비위원장 김정록(재향군인회 영국지회장)

▶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자유민주아카데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 국제화제 3층 (북창동 93-45)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